

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2018. 4.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4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5
(1)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6
(2)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주의).....	1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보고서” 등을 점검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보고서” 등을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018. 3. 5.부터 같은 해 3. 16.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감사종료 하루 전인 2018. 3. 15.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8.

4. 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조직 및 인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 인허가, 금융감독원의 업무 감독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표 1]과 같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금융위원회 조직 현황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위원 7명(상임 2, 비상임 1, 당연직 4 ²⁾)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설치(특정금융정보법)
증권선물위원회	·공정 자본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관련 심의·의결 *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4명(상임 1, 비상임 3)
사무처	·사무처장,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20과

그리고 [표 2]와 같이 본부 224명, 금융정보분석원 55명 등 총현원은 279명이다.

[표 2] 금융위원회 인력 현황(파견, 휴직 등 별도정원 제외)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특정직(경찰)		연구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67	279	2	2	3	3	252	264	8	8	2	2
본 부	207	224	2	2	3	3	201	218	-	-	1	1
금융정보분석원	60	55	-	-	-	-	51	46	8	8	1	1

-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 당연직: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2. 세입 및 세출 예산

금융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78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6개 기금³⁾ 34조 8,884억 원 등 계 34조 9,662억 원이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조 334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6개 기금 34조 8,884억 원 등 계 36조 9,218억 원이다.

[표 3]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일 반 회 계	20,334
인건비	233
기본경비	74
주요사업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출자(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800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66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415 ▪ FIU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48 	2,025
회계기금 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전출금 	18,000

주: 2017. 12. 31. 현재 예산현액 기준 경비별 분류(인건비·기본경비·주요사업비 등)

3. 성과관리체계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는 [표 4]와 같이 프로그램목표 10개와 단위사업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임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전략목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4개, 프로그램목표 10개, 단위사업 17개(일반재정 12개, 정보화 5개)

3)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진흥원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I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를 처분요구 종류별로 구분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합계	주의	통보
2	1	1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금융위원회는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부서별 소속 직원들이 복합기 등 임차계약금액 계 1,009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출하였고,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150백만여 원의 예산 절감 기회 상실
- ② 금융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램목표가 추구하는 성과의 일부만을 반영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사업의 성과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정방법과 실적치 측정방법에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목표치와 실적치 간 일관성 결여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반경쟁에 부쳐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조치하였다.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감사와 관련하여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

정면책 요건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1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였다.

직권면책에 따른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관련 지적사항(요지)	신청자	처리결과	면책 인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지적요지: 국가계약법 제15조 등에 명시되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제출받지 않고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 지급 	직권면책	면책인정 (불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면책요건 모두 충족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목차

○ 금융위원회

일련 번호	소관기관	회계 또는 감찰	처분요구 등 종류	제 목	금액 (인원)
1	금융위원회	회계	통보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2	금융위원회	회계	주의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나.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금융위원회

조 치 기 관 금융위원회

내 용

1. 업무 개요

금융위원회는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계약을 부서별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일반수용비 비목 등)로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등(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상적 수용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행정인사과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행정인사과장을 계약관으로 두고 있고 행정인사과의 계약실무담당자를 계약관의 보조자로 두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임차계약의 경우 총계약기간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임차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는 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관련 임차료는 경상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 및 일괄계약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총계약기간 기준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료를 각 부서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면서 관련 계약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각 부서별 소속 직원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 ~ 3. 16.) 동안 금융위원회의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료 집행 및 임차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예산 절감기회 일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출한 부서별 임차료 집행 내역⁴⁾을 검토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총 332백만 원의 임차료를 지출하는 등 [별표 1]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료 지출내역”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계 1,009백만 원(연평균 318백만 원⁵⁾)의 임차료를 부서별로 각각 수의계약 체결한 후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를 경쟁입찰에 부쳐 일괄계약을 체결한다면 조달청의 동종물품 낙찰률을 감안할 때 약 150백만 원⁶⁾(연평균 47백만 원⁷⁾)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각 부서별 소속 직원이 계약 체결

금융위원회가 2014년⁸⁾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체결한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계약 중 2018. 3. 14. 감사일 현재에도 유효한 계약내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운영정보팀 사용 복합기의 경우 소속 직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데도 2016. 3. 2.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35,640,000원, 계약기간 2016. 3. 2. ~ 2019. 2. 28., 복합기 1대)을 체결하는 등 [별표 2]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각 부서별 소속 직원이 체결한 사무용기기 임차계약 내역”과 같이 전체 24건의 계약(총계약금액 598,680,000원⁹⁾, 계약기간 3년 등, 복합기 등 27대) 전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각 부서별 소속 직원들이 체결하였다.¹⁰⁾

4)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임차료 지출금액은 관련 계약금액보다 높음

5) 1,009,809,940원(총지출금액) ÷ 38개월 × 12개월 = 318,887,349원

6) 1,009,809,940원(총지출금액) × 14.95%(2017년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대서비스의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 85.05% 적용) = 150,966,586원

7) 150,966,586원(예산절감추정 총액) ÷ 38개월 × 12개월 = 47,673,658원

8) 2014년 체결 계약 중 일부는 계약 자동연장에 따라 2018. 3. 14. 감사일 현재에도 유효하여 분석대상에 반영

9) 연도별 계약금액(계약체결일 기준)은 2014년 계 75,180천 원, 2015년 계 80,640천 원, 2016년 계 145,200천 원, 2017년 계 252,120천 원, 2018년 계 45,540천 원이고, 이는 감사일 현재에도 유효한 계약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임차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계약된 금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음

10)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지급원인행위(계약)는 관서운영경비

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계약관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각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2017. 6. 30. 복합기 임차 계약의 계약금액이 83백만 원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과 임차계약(계약기간 2017. 7. 1. ~ 2020. 6. 30., 복합기 3대)을 체결 하면서 이를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는 등 [표]와 같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건의 계약(총계약금액 150,480,000원, 계약기간 3년, 복합기 등 5대)을 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 임차 수의계약 부적정 내역

(단위: 대, 천 원)

연번	계약부서	계약일자	계약방법	업체	임차 물품	수량	계약기간	월임차료	계약금액
1	금융정책과	2017. 4. 1.	수의계약		인쇄기 (-)	2	2017. 4. 1. ~ 2020. 3. 30.(3 년)	1,870	67,320
2	자본시장국	2017. 6. 30.	수의계약		복합기 (-)	3	2017. 7. 1. ~ 2020. 6. 30.(3 년)	2,310	83,160
계						5			150,48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출납공무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 부서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두고 있는데, 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체결된 사무용기기 임차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쳐 일괄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복합기 등 사무용기기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부쳐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금융위원회

조 치 기 관 금융위원회

내 용

금융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는 [표]와 같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임무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전략목표, 10개 프로그램목표, 17개 단위사업이 설정되어 있는 한편,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1개와 단위사업 성과지표 33개 등 계 44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체계도

임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목표	· 전략목표Ⅰ.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목표Ⅰ-1.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산업금융을 원활히 지원한다 등 3개
	· 전략목표Ⅱ. 서민·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프로그램목표Ⅱ-1.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주택금융을 원활히 지원한다 등 4개
	· 전략목표Ⅲ.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목표Ⅲ-1.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등 2개
	· 전략목표Ⅳ.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 프로그램목표Ⅳ-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3. 5. ~ 3. 16.) 중 위 2017회계연도 성과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를 지엽적으로 설정

(전략목표)Ⅰ.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Ⅰ-3. 국책은행(산은, 수은)을 활용하여 산업금융을 원활히 지원한다

(성과지표) 후순위 대출 보증지원을 통한 선박금융 창출액

(단위사업)Ⅰ-3-일반재정(1)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성과지표) 해운업 등 선박건조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공급액

(단위사업)Ⅰ-3-일반재정(2) 산업은행 출자

(성과지표)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집행을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는 [프로그램목표Ⅰ-3] ‘국책은행(산은, 수은)을 활용하여 산업금융을 원활히 지원한다’의 성과지표로 ‘후순위 대출 보증지원을 통한 선박금융 창출액’이 설정되어 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프로그램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일반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보다는 정책 대표범위가 넓어야 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는 [프로그램목표 I-3]의 주요내용으로 ①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통한 해양보증보험 지원(단위사업 I-3-일반재정(1)과 연관, 관련 예산 650억 원), ② 산업은행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등 금융지원(단위사업 I-3-일반재정(2)와 연관, 관련 예산 800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3]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 예산 규모가 작은 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3]의 성과지표를 위 ①(예산 비중 44.8%)과 관련하여 ‘후순위 대출 보증지원을 통한 선박금융 창출액’으로 설정함으로써, 예산비중이 높은 위 ②(예산 비중 55.2%)에 대해서는 포괄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목표가 추구하는 성과의 일부만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성과지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2. 목표치 산정방법 및 실적치 측정방법 간 기준의 일관성 결여

(전략목표) IV. 튼튼한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 IV-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성과지표) 국회제출 또는 통과법안

금융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프로그램목표 IV-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의 성과지표로 ‘국회제출 또는 통과법안’을 설정하면서, 목표치는 ‘법제처에 제출하는 정부입법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실적치 측정방법은 ‘국회제출 또는 통과법안’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적치 측정방법은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V-1]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정방법 및 실적치 측정방법을 정할 때에는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목표치와 실적치 간의 합리적 비교를 통하여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프로그램목표 IV-1]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정방법과 실적치 측정방법에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자는 법안통과를 제외한 채 입법제출계획만을 기준으로 하고 후자는 법안제출 및 통과실적을 모두 포함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목표치와 실적치 간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목표치 산정방법 및 실적치 측정방법 간 기준의 일관성이 상실되어 합리

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는 성과관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에 단위사업 내용을 포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정방법과 실적치 측정방법 간에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